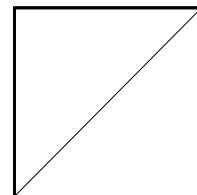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2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3. 31. (제 6 차)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3. 31.

## 1. 의결주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 2. 제안이유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되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52조 등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2항,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제1항, 제2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1항 제3호, 제3항 제2호, 제7조(과태료) 제1항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별표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별지4호]

-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제52조(과태료) 제5항 제5호
-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 라. 관계부서 협의

-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2021.2.5.) 심의필

<별지>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기관경고 및 과태료 9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①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기관경고)  
②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900만원)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신용정보법」 제52조 제5항 제5호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4]

### ☐ 개인에 대한 조치

- 부장 000 : 감봉1월

- 조치사유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5조의2 제3항 제2호

○ 상무보 000 : 견책

- 조치사유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5조의2 제3항 제2호

○ 상무보 000 : 견책

- 조치사유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5조의2 제3항 제2호

○ 팀장 000 : 견책

- 조치사유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5조의2 제3항 제2호

○ 차장 000 : 견책

- 조치사유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5조의2 제3항 제2호

○ 팀장 000 : 견책

- 조치사유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5조의2 제3항 제2호

○ 이사대우 000 : 견책

- 조치사유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5조의2 제3항 제2호

## 2. 조치사유

### 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1)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관련부서 간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상 부주의 등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 금감원은 2017·2018년 동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통보 지연 및 누락 소지가 있으므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관련부서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에 대한 내규상 대사·점검 절차\*도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 동 은행의 내규 「  」(2018.4.12. 시행) 등에 의하면 ◇◇◇◇팀은 ○○○○부와 □□□□팀으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를 실제 명세와 대사토록 되어 있음

2015.7.10.~2020.6.17. 기간 중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미통보(△△건) 또는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 은행의 대외기관 정보제공 및 명의인 통보 절차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의무 위반 내역

조치 대상		위반 건 (계)	미통보	지연통보	유예기간중 통보	위반 기간
행위자	(前)이사대우 O O O <sup>주</sup>	8,058	1,915	52	6,091	2015.7.10.~2019.3.16.
	부 장 O O O	1,718	1,544	174	-	2019.4.10.~2020.6.17.
감독자	상 무 보 O O O	9,431	3,235	105	6,091	2016.5.12.~2020.1.16.
	상 무 보 O O O	322	204	118	-	2020.2.5.~2020.6.17.
보조자	팀 장 O O O	8,067	1,923	53	6,091	2015.7.10.~2019.7.30.
	차 장 O O O	1,387	1,332	55	-	2019.8.3.~2020.1.16.
	팀 장 O O O	322	204	118	-	2020.2.5.~2020.6.17.
	이사대우 O O O	8,887	3,357	180	5,350	2017.8.10.~2020.5.16.
	(前)이사대우 O O O <sup>주</sup>	51	51	-	-	2017.10.19.~2019.9.28.
계		9,776	3,459	226	6,091	-

주)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대상임 (OOO: 2019.12.30. 퇴직, OOO: 2019.12.13. 퇴직)

### (2)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사용목적,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명의인에게 우편발송하는 업무가 ◇◇◇◇팀과 우편발송 업체 간 이메일로 처리되고 있어 우편발송 일자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 통보 내역에 대한 기록·관리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우편발송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인 통보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 절차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2015.7.10.~2020.6.17. 기간 중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 관리부」상 명의인 통보 일자는 ○○○○○부 등이 명의인 통보대상을 전산 조회한 일자로서 이중 ▲▲▲건은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내역

조치 대상		위반 건	위반 기간
행위자	(前)이사대우 ○○○ <sup>주)</sup>	3,154	2015.7.10.~2019.3.16.
	부 장 ○○○	1,718	2019.4.10.~2020.6.17.
감독자	상무보 ○○○	4,547	2016.10.21.~2020.1.16.
	상무보 ○○○	322	2020.2.5.~2020.6.17.
보조자	팀 장 ○○○	3,163	2015.7.10.~2019.7.30.
	차 장 ○○○	1,387	2019.8.3.~2020.1.16.
	팀 장 ○○○	322	2020.2.5.~2020.6.17.
계		4,872	-

주)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대상(2019.12.30. 퇴직)



## 나.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부)은 2018.1.1.~2020.6.30.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채무보증정보(☆☆계좌\*)를 등록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등록 해제한 사실이 있음

\*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보증채무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개인채무보증정보 등록 해제사유) : 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붙임1)

## 관 계 법 규

### 1. 금융실명제 관련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라.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법 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300
마.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
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금융회사등	법 제8조	1,000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4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																	
(보관기간 : 5년)																	
관리 번호	요구 일자	요구 기관	요 구 자 인적사항		사용 목적	법적 근거	요구받은 인적사항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 일자	제 공 자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	명익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제 공 된 인적사항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담당자	책임자		통보 유예를 한날	사유			기간	횟수		
			담당자	책임자													

1. 사용목적 :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요구받은 인적사항 및 제공한 인적사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3. 통보를 유예한 경우 사유 : 법 제4조의2 제2항 각호중 해당번호를 기재

## 2. 신용정보 관련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45조(감독·검사 등)**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4항 제5호	1,000
러. 법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4항 제6호	1,000
머.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2,400

**3. 검사 및 제재 관련 법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2017.10.19. 개정)**

**2. 과태료 산정방식**

-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결과를 ‘중대’로 본다.

####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2017.10.19. 개정)

##### 1~2. (생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제449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준용규정 포함)

- (1) 위반건수 : 확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계약 건수
-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한 계약 건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1) 중 대 :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경 미 : 판매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등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적용



(붙임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4.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임직원	○ 과태료 부과(2명) ○ 감봉 1명, 견책 6명, 주의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실 2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관련부서 간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상 부주의 등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 금감원은 2017·2018년 동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업무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통보 지연 및 누락 소지가 있으므로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관련부서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에 대한 내규상 대사·점검 절차\*도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 동 은행의 내규 「대고객 우편발송 업무」(2018.4.12 시행) 등에 의하면 ◇◇◇◇팀은 ○○○○부와 □□□□팀으로부터 전달받은 통보대상 명세를 실제 명세와 대사토록 되어 있음

2015.7.10.~2020.6.17. 기간 중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미통보(△△건) 또는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 (나)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사용목적,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팀)은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명의인에게 우편발송하는 업무가 ◇◇◇◇팀과 우편발송 업체 간 이메일로 처리되고 있어 우편발송 일자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 통보 내역에 대한 기록·관리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우편발송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인 통보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 절차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2015.7.10.~2020.6.17. 기간 중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 관리부」상 명의인 통보 일자는 ○○○○부 등이 명의인 통보대상을 전산 조회한 일자로서 이중 ▲▲▲건은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

#### < 관련법규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제2항, 제4조의3 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항·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 (2)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舊 신용정보법'이라 함)」(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 본부)은 2019.1.1.~2020.7.24.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 舊「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 본부)은 2016.3.12.~2020.7.24. 기간 중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건)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52조 제3항 제3호, 제5항 제6호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제4항, 제7항, 제38조, [별표4]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2항, 제3항

(3)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 본부)은 2018.1.1.~2020.6.30.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채무보증 정보(☆☆계좌\*)를 등록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등록 해제한 사실이 있음

\*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보증채무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개인채무보증정보 등록 해제사유) : 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사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52조 제5항 제5호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8조, [별표4]

##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 (1)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는데도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부)은 2010.4.2. ■■■■■의 선물환거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매매호가(스왑포인트)를 사전에 알려주면 그보다 더 높은 매매호가를 제시하여 입찰에서 떨어지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고,

\*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는 업무가 과중한 상태여서 ■■■■■과의 거래를 회피하려 하였으나 ■■■■■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타 은행보다 조금 더 불리한 매매호가를 제출하여 탈락하고자 하였다고 주장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가 ◆◆◆은행 서울지점 및 ○○○은행 서울지점의 매매호가\*를 알려주자,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에게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매매호가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

\* ◆◆◆은행 서울지점 담당자는 ○○○은행 서울지점과도 매매호가를 교환

####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9호,  
제422조 제2항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3호,  
제390조, [별표4]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일반은행검사국
연락처	02-2100-2676 02-2100-2697	02-3145-7062